

협치 다짐 일주일만에... 여야, 국회 상임위 곳곳 충돌

행안위, 지역화폐법 통과...국토위, 대통령 관저 증·개축 의혹 놓고 공방 예결위 '나치 발언' 대립...검찰총장 후보 등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협치를 하자고 다짐했던 여야가 다시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비정기 민생법안 합의 처리와 1일 여야 대표 회담으로 '민생 협치' 분위기가 오는 듯했지만,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연일 단독 처리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면서 대치 정국으로 전환하는 듯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당론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반발해 왔지만, 민주당은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했다. 여당 행안위원들이 전원 '반대' 표를 던졌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부 결산안 부대 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부대 의견 명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용산구청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공문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파행 속에서 부대 의견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상정으로 인한 여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비판하며 민주당

당 소속 정청태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이 이날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이틀째 불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나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엄 의원이 "야권의 선전 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공방이 가열되자 회의가 잠시 정회했다가 엄 의원의 유감 표명 이후 회의가 이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야당 요청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적극·부적격 사유를 명기해 의결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이 취소를 요청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선거 농단"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직 의원은 애초 '컷오프' (공천 배제)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법안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야당 대표도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밭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막장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이달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과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민생 협

력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야는 최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동공약 협의기구'를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구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정국 경색이 이어질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를 단계적 인상,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을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오늘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어제 '지역화폐법' 처리 여파
6일 예정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에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5일 "금일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6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결국 회동 하루 전 전격 무산됐다.

여의도 브리핑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플랫폼 책임 강화”

조인철,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딥 러닝 deep learning+가짜 fake 합성어)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늘어나 관련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서구갑) 국회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진·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외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 금지 ▲ AI 제작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마크) 의무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즉시 삭제, 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野 “정부 연금개혁안, 연금 삭감 위한 졸속 정책”

자동차조정장치·차등 인상 비판...“노후 대비 부족한 ‘푼돈 연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핏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한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 등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을 지우는 사회보장정책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취지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을 중단하는 것일 뿐 소득 보장 강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남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서 나왔던 안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양보해서 제시했던 안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우리가 논의의 시작할 출발점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이견을 좁힌 바 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더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